

## 제3장

#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제1절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제2절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제2-1절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제3절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제3장

##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 제1절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 1) 자치권한의 한계

- 입법권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가능, 조례의 실효성 미흡
  -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 가능 규정, 주민 권리를 제한 및 의무 부과사항에 대해 법률 위임에 따르도록 하여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여 조례의 실행력이 미흡함
- 조직권 : 정책 수요에 따른 조직 및 인력 구성 곤란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과 정원 운영, 직위 구성에 대해 지방자치법,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정책 수요에 따른 조직 및 기구, 인력 구성이 어려움
- 재정권 : 조세권 부재,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세출권 제약
  - 지방세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가능, 지자체는 중앙의 정책사업 매칭과 국고보조사업, 복지예산의 부담으로 정책 수요에 따라 활용 가능한 세출권 제약

## 2) 행정의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

- 일방적, 하향식 의사결정의 한계
  - 행정정보공개, 설문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에서 수행, 정책 과정에서의 피드백 여부 등은 확인하기 어려움

## 3) 공공성 가치 및 사회 혁신 실현 지원 필요

- 사회적 위험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성 가치 필요
  -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적극적 대응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적 가치, 공공성의 가치 창출이 필요해짐
- 다양한 사회혁신 지원하는 행정
  - 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사, 성과, 정책, 행정서비스 등의 신뢰성, 효과성, 시민 생활의 편리성을 향상,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지원해야 함

##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전략목표 : “민주적, 과학적 방법을 통한 도민주도형 정책 결정” 실현
- 정량목표 : 경상남도 자치권한(주민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표 3-3-1〉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마을자치회(가칭)	주민자치회(305개)	마을자치회(4,000개)	마을자치회(8,243개)
재정자립도	33.9%	40%	50%
주민참여예산 비중	2.61%	10%	20%

### 2) 추진방향 및 전략

#### (1)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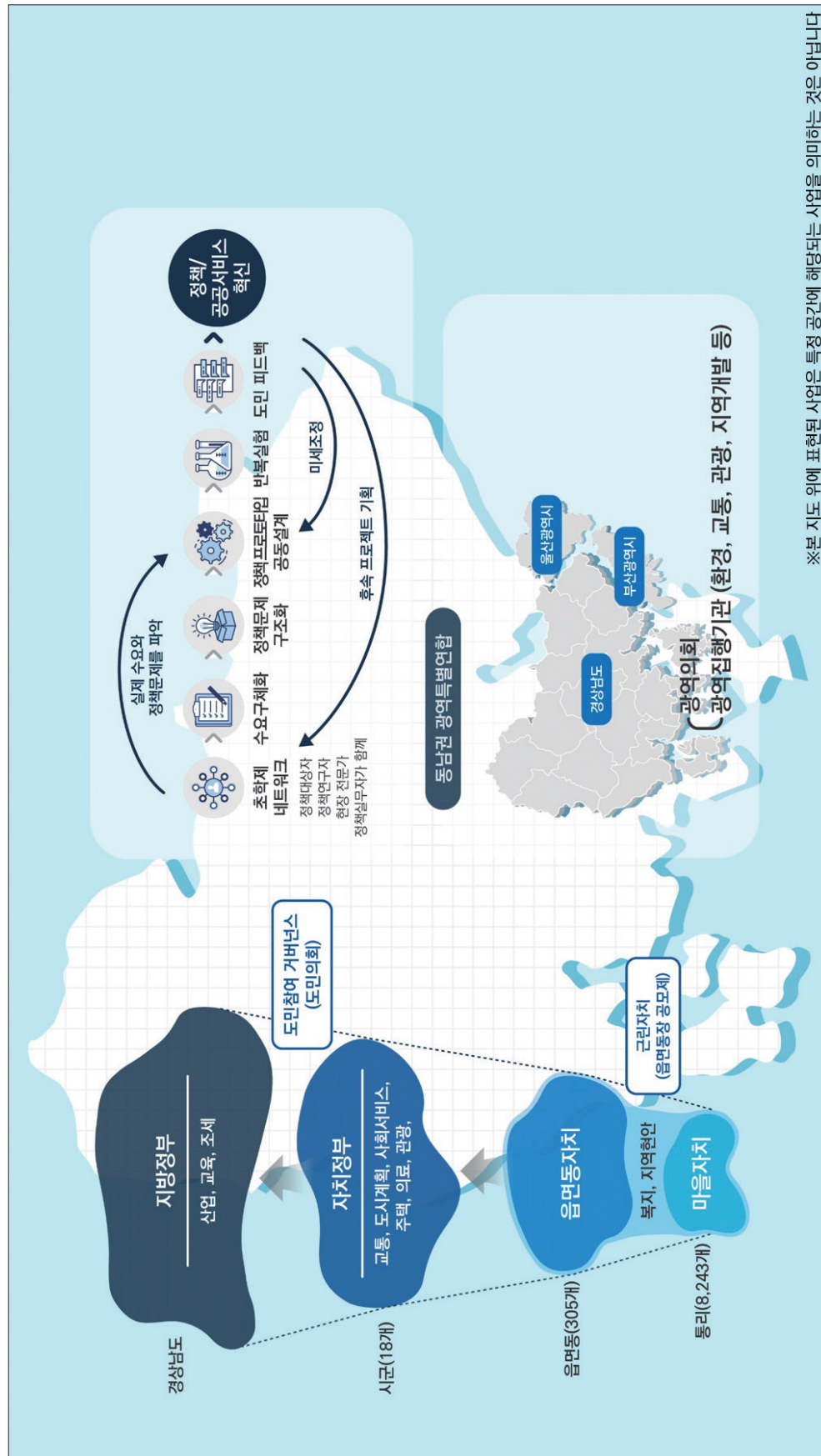
- 자치정부 형태의 다양화
  - 지역 특성과 주민 선호에 따른 자치정부 형태 선택
- 근린자치 활성화
  - 경상남도-시군-통리(마을)의 역할 배분 및 재정립
- 민주적 공론장 및 정책 랩(Policy Lab) 운영
  - 행정과 도민 간 공론화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상호학습 기반의 정책 공동생산
-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부 실현
  - 빅데이터, AI, IoT 등 ICT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 (2)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2단계(중기) : 주민자치조직 중심 정부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책 과정 운영
- 3단계(장기) :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역자치정부 수립

〈그림 3-3-1〉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구상도



###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 (1) 경남도내 기초자치정부 형태의 다양화

##### ● 지역 특성과 주민 선호에 따른 자치정부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

- 인구 규모, 행정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자치정부 형태 중 기관대립형(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기관통합형(지방의회-책임행정관), 집행위원회 형(집행위원들)(자치분권 로드맵 제안 유형)을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

– 현재의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근린자치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단위로 행정구역 개편

#### (2) 동남권 광역연합 구성 및 운영

##### ● 동남권(경남, 부산, 울산) 연합체 설립

- 광역의회를 구성, 교통, 관광, 환경, 지역개발 등 사무를 집행하는 광역집행기관을 동남권광역교통본부, 동남권광역관광본부 등의 형태로 설치

#### (3) 근린자치 활성화

##### ● 도-시군-통리(마을) 역할 배분

- 도의 경우 산업, 교육, 조세 관련 사무, 시군의 경우 교통, 도시계획, 의료, 관광, 사회서비스, 주택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읍면동과 통리의 경우 복지 사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현안을 결정하도록 함 이를 위해 주민자치조직을 수립, 강화하여 근린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을 활성화

#### (4) 정책 랩(Policy Lab) 운영<sup>3)</sup>

##### ● 행정-도민 간 상호학습 기반의 정책 공동생산

- 경남도 정책설계를 위한 디자인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기반 개발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주요 정책추진과정에 관한 적극적 정보공개, 각 실·국별 업무에 대해 도민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 도민모니터링 및 평가하도록 함

#### (5) 민주적 공론장 운영

##### ● 행정-도민 간 공론화 시스템 구축 및 상시적 활용

- 주민 수요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함. 퍼실리테이터 역할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갈등 이슈 및 관리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상시 운영

3) 정책 랩(Policy Lab) 모델은 한국행정연구원(조세현 외, 2019)의 개방형 정책협업모델 연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힘(149p 그림 포함)

## (6)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부 실현

### ● ICT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 빅데이터, AI, IoT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여 도민 통합 인증, 거래 및 계약 서비스와 온라인 투표 등을 비롯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정책별 통합솔루션을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신속성, 신뢰성,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현함

#### (공동체기반 포용사회 전략1) 시·군 계획지침

- 주민자치조직 수립 및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린거버넌스 체계 구축
- 시·군 행정서비스의 신속성, 신뢰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ICT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행정 플랫폼 구축 방안 강구

## 제2절

지속가능한  
경남맞춤형  
인구정책

〈그림 3-3-2〉

경상남도 과거  
20년간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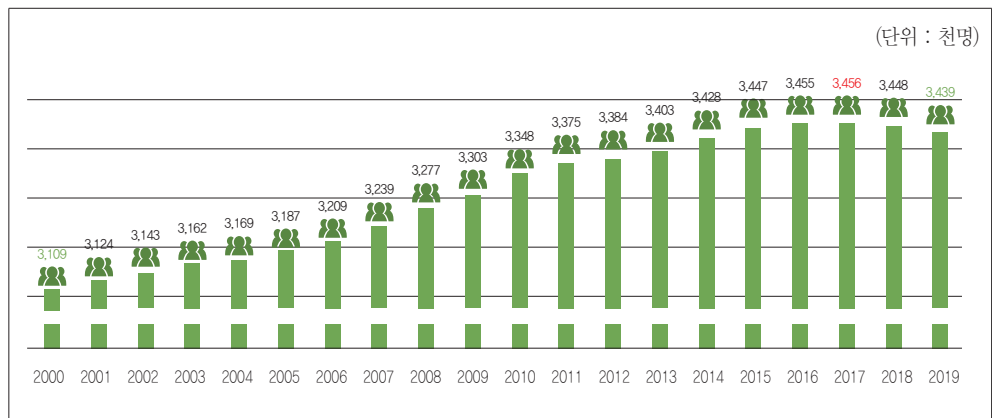
##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 1) 경남의 인구 추이 및 전망

## (1) 과거 20년간 인구 추이

## ● 과거 20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다 2017년도를 기점으로 인구 감소

-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 약 3,45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2019년 기준 약 3,439천명)



## (2) 미래 20년간 인구 전망

## ● 고위추계 기준으로 인구 유지하나, 중위추계 및 저위추계는 인구 감소 전망

- 통계청(2019) 발표에 따르면 경남의 2040년 인구는 고위추계(334만명), 중위추계(320만명), 저위추계(306만명)으로 전망(등록센서스 기준)

## 2)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의 필요성

## ● 지속가능 경남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 필요

- 인구 문제는 경남도의 모든 정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슈로서 인구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저출생 및 고령화 등의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남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함

##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 전략목표 : “경남 목표인구 달성 및 도민 행복” 실현
- 정량목표 : 인구 334만명 유지, 행복지수 상위 20%, 성평등 레벨 2 이상 유지

〈표 3-3-2〉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인구	334만명(주민등록인구 기준)	340만명	334만명
행복지수	상위 40~60%	상위 20~40%	상위 20%
성평등 레벨	레벨 2~4	레벨 2 이상 유지	레벨 2 이상 유지

자료 : 통계청; 국회미래연구원; 여성가족부.

### 2) 추진방향 및 전략

#### (1)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방향

- 성평등을 기반으로 도민의 기회와 선택의 보장
  - 성평등 기반 조성 : 평등과 공정을 토대로 한 사회체계 확립
- 다양성이 인정되는 지역사회 기반 구축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및 다양한 정주환경 조성
- 육아가 행복한 정책지원 강화
  -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의 체감도 제고 및 안전하고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
- 은퇴자를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환경 조성
  - 은퇴자의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및 경제적 활동 여건 제공
-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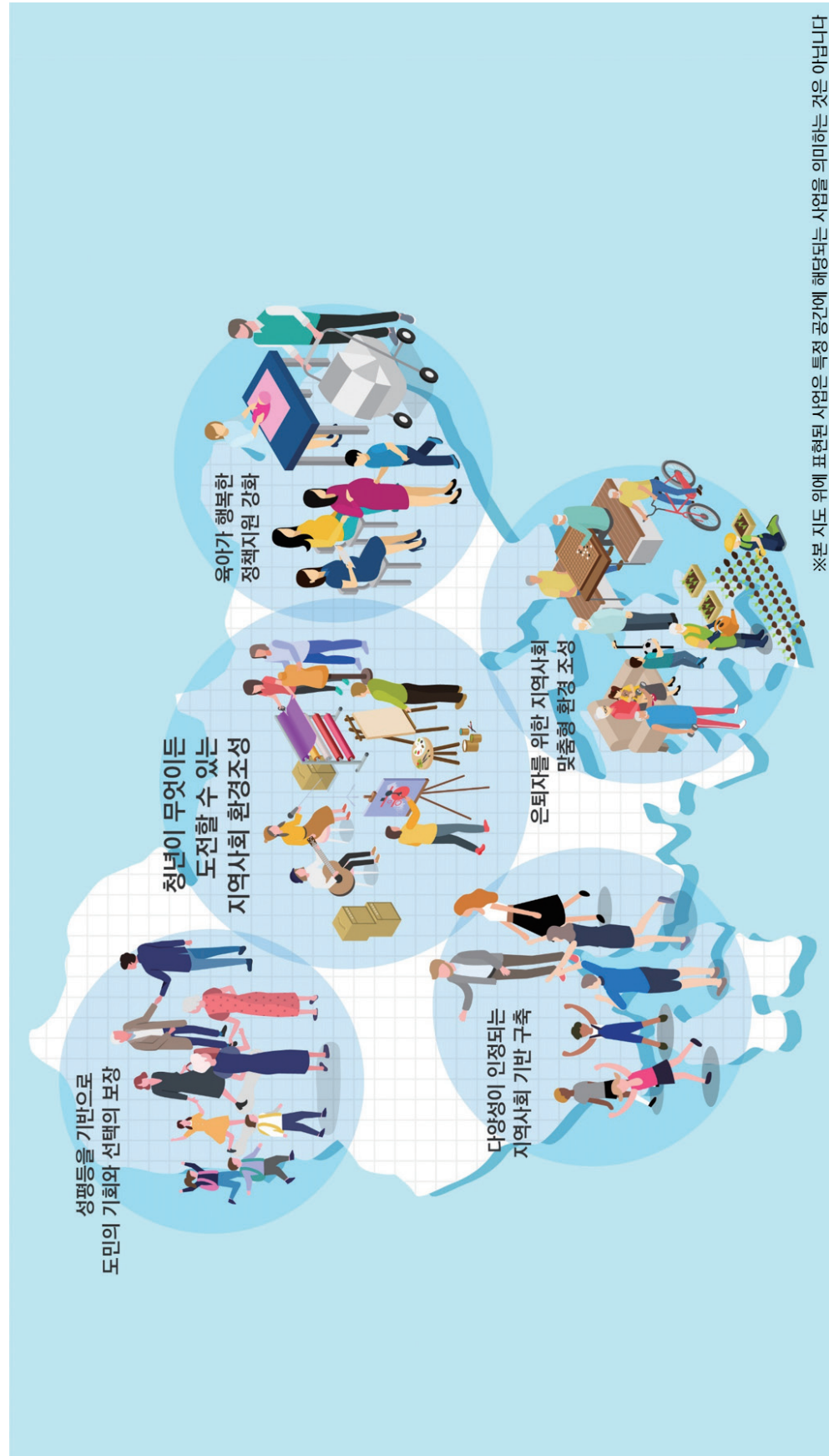
#### (2)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실효성이 높은 인구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 및 기반 구축
- 2단계(중기) : 성공적인 인구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인구 모델 제시
- 3단계(장기) : 2040 인구 목표(334만명) 달성



〈그림 3-3-3〉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구상도



###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 (1) 성평등을 기반으로 도민의 기회와 선택의 보장

- 성평등 기반 조성 : 평등과 공정을 토대로 한 사회체계 확립
  - 경남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통한 여성가족정책 및 사업 체계적인 추진
  - 경남도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도민 대상의 성평등 교육 제공
  - 경남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성평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구성
  - 정책의 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 (2) 다양성이 인정되는 지역사회 기반 구축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 법률혼 관계에만 지원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
  -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 전체의 공동체성 강화
- 외국인 이주를 위한 다양한 정주환경 조성
  - 농어업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생활인프라 제공
  - 지식서비스 외국인 이주자의 니즈 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거환경 인프라 제공

#### (3) 육아가 행복한 정책지원 강화

-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의 체감도 제고
  - 부모 부담 완화 : 난임부부 지원 강화 및 산후조리 지원 확대
  - 돌봄의 신뢰성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자녀 양육부담 분담
- 안전하고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
  - 누구든지 주저 없이 결혼 · 임신 · 출산 ·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센터 설립

#### (4) 은퇴자를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환경 조성

- 은퇴자의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조성

#### ● 은퇴자의 경제적 활동 여건 제공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은퇴자 정착 프로젝트 추진
- 은퇴자의 주거 환경 및 경제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은퇴자 정착 컨설팅 전문 기관 설립

### (5)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조성

#### ● 청년의 경제적 독립과 생활 안정 지원 기반 조성

- 양질의 교육 서비스 공급
- 경제활동 기회 확대
-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 청년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립

#### ● 청년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특별도 경남 완성

- 청년이 꿈을 찾도록 지원
- 청년의 창업 도전 지원
- 청년의 사회혁신활동 도전 지원
- 청년의 창작활동 도전 지원

#### (공동체기반 포용사회 전략2)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의 과다한 계획인구 추정을 지양하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계획인구 추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성평등 기반 조성, 다양성 존중,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 은퇴자 맞춤형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된 시·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 정책 수립 강구

## 제2-1절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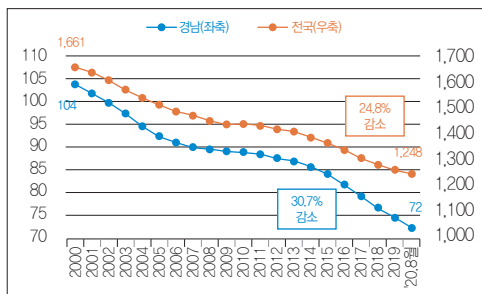
##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 1) 경남 청년 인구 유출 문제 심화

## ● 경남 청년 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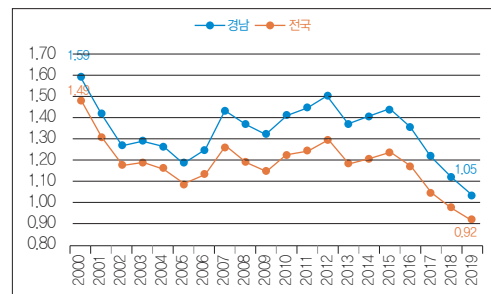
- 경남 청년(15~34세)인구 2000년 104만명 → 2020년 8월 72만명, △30.7% 감소
- 청년 인구감소는 출산율 감소라는 자연 요인과 지역 간 인구이동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합계출산율이 전국보다 높음에도 청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감소, 인구 유출 영향

〈그림 3-3-4〉

청년 인구 규모 및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청년 인구 규모 변화 추이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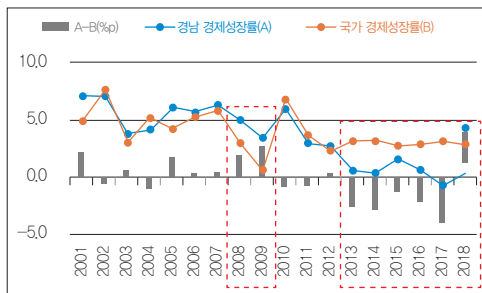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 경남 청년 인구 유출 규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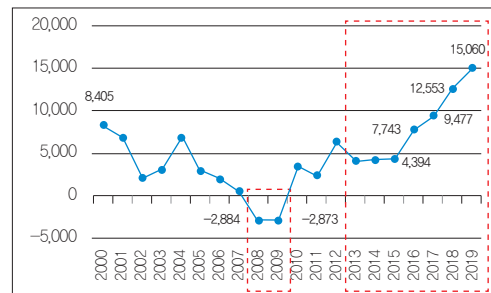
- 경남 경제 상대적 악화(전국보다 낮은 성장률 지속)로 청년 인구 유출 급격히 증가
-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기(2008~2009년)에 청년 인구 유입에 반해, 최근(2015년 이후) 유출 급증

〈그림 3-3-5〉

경제성장률 및  
청년 인구 유출  
규모 변화 추이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지역소득.



청년 인구 유출 규모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2) 청년을 위한 특별한 미래 전략 구상 필요성

## ● 청년의 생활 터전으로서 경남의 매력력이 경기 악화와 함께 급격히 하락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성장의 중심이 기존 전통산업에서 IT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 가속화
- 전통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의 경제구조와 경기 악화 → 청년 인구 유출 지속 전망

## ●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의 도전이 절실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혁신에 참여할 역동적인 청년층의 지역 유입 전략을 강구해야 할 때

##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전략목표 : “청년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특별도 경남” 실현
- 정량목표 : 매년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를  $\pm 1$ 천명 이내에서 안정화

〈표 3-3-3〉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청년 인구 순유출규모	15,060명(2019년)	4,000명 내외 (2010~2015년 평균 수준)	$\pm 1,000$ 명 이내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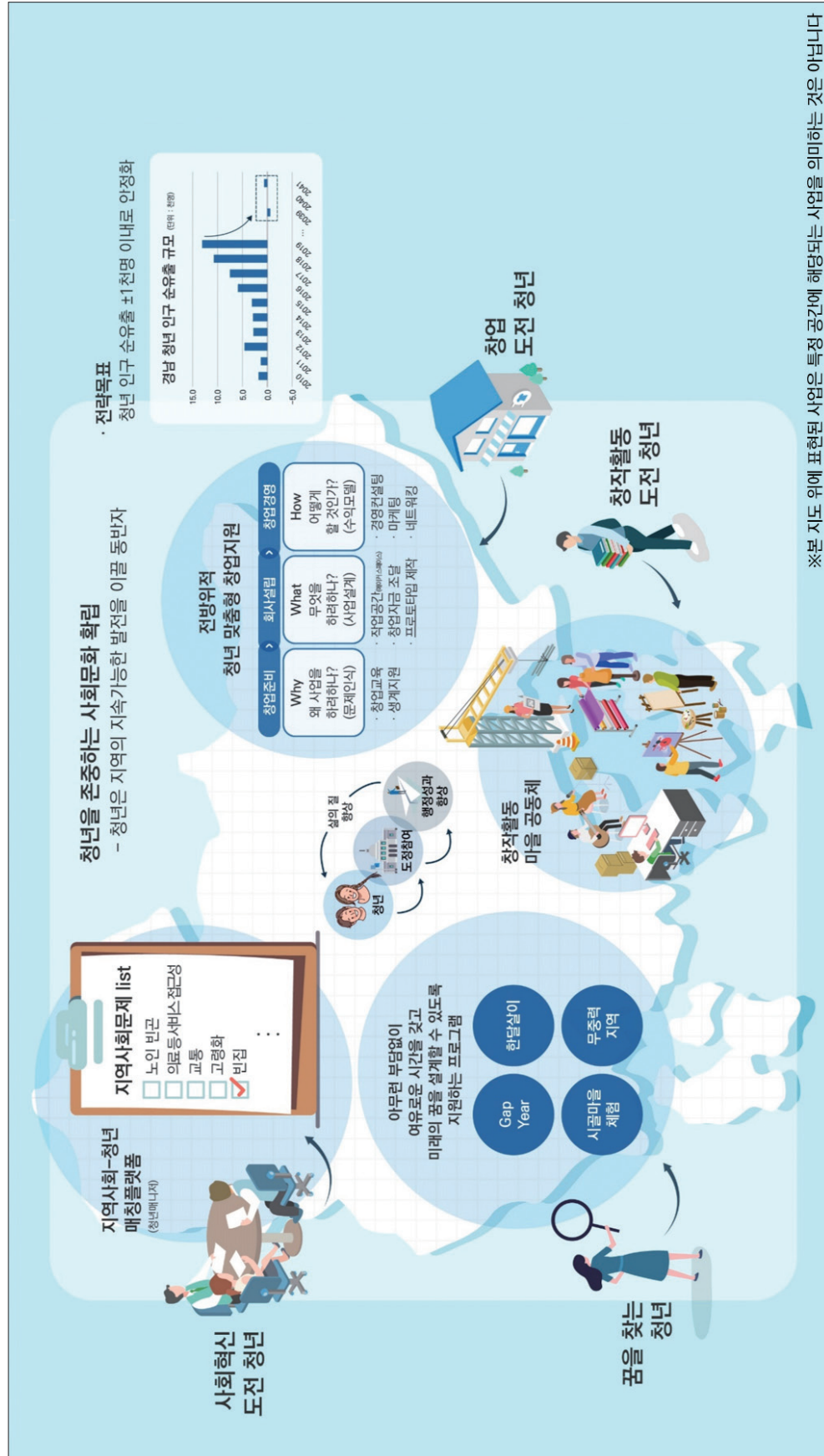
### 2) 추진방향 및 전략

#### (1)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추진방향

- 청년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립
  - 청년이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사회문화 확립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주체로서 청년 인식 확산
- 청년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의 교육역량 강화 및 교육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공급
  - 청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청년 생애 과업의 원만한 이행과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청년의 자유로운 도전을 위한 최적의 여건 조성
  - 청년이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창업과 사회혁신활동, 창작활동 등 도전을 적극 지원

〈그림 3-3-6〉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구상도



## (2)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청년의 경제적 독립과 생활 안정 지원 기반 조성
- 2단계(중기) : 청년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립
- 3단계(장기) : 청년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특별도 경남 완성

##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 (1) 청년의 경제적 독립과 생활 안정 지원 기반 조성

- 양질의 교육 서비스 공급
  -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의 취업과 진로 보장
    - 기술기반 학교공간혁신
    - 기초과학 인재 양성 지원 확대와 과학문화 전문 인력 양성
  - 대학교육혁신으로 지역 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 도-대학 상생발전협의회 및 대학교육 플랫폼 운영
    - 지역대학 석·박사급 인재 해외 파견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및 인공지능 대학원 학과과정 신설 등
  - 생애주기 평생학습 체계 구축
- 경제활동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일자리 공급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 산업단지 및 지역 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문화 전문 인력양성 및 창업 활성화
    - 공유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확산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 농어촌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 청년농업인 유입 및 거주 확대, 차별화된 귀어 지원을 통한 어업 후속 인력 확보
  -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을 통한 노동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해소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경남 중소기업 일자리 질 향상



### ●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교육비, 취업활동비, 필수 생계비 등 지원을 통한 공정한 출발선 보장
-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확대 및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녀 양육부담 분담 등 안전하고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

## (2) 청년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립

- 청년이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문화 확립
- 청년 이용 공간 확대 및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 청년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는 정책 환경 조성
- 청년 참여 기반 구축 등 청년 참여 정책 확대
- 청년참여예산제도, 청년영향평가 도입 등 청년의 참여로 도정의 성과가 향상되고, 청년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 (3) 청년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특별도 경남 완성

### ● 청년이 꿈을 찾도록 지원

- 갭이어(Gap year), 한 달 살이, 시골마을 공동체 체험, 무중력 지역 등 꿈을 찾는 청년의 여정 지원
- 지역 맞춤형 스토리 발굴 및 생활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년친화도시 조성 확대

### ● 청년의 창업 도전 지원

- 창업 교육, 컨설팅, 프로토타입 제작, 작업공간, 창업자금, 네트워킹, 마케팅을 비롯해 창업 준비기간 생계비 지원 등 전방위적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창업이 쉬운 스마트 창업 생태계 구축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 강화
- 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지역 기반 스포츠 기업 육성 등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 ● 청년의 사회혁신활동 도전 지원

- 지역사회-청년 매칭 플랫폼 구축으로 기존 공동체 구성원이 원하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사회혁신 투자 지원 강화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확대 등 공동체 활동 지원 강화



-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사회 중심 돌봄 서비스 구축을 통한 청년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 ● 청년의 창작활동 도전 지원

- 작가, 예술가, 건축가 등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꿈을 가진 청년이 부담 없이 오가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조성
- 마을공동체성 회복 및 공동체 마을 육성 지원
- 도민 중심 문화예술 활동 및 전문예술인 지원 확대
- 생활권 문화기반 시설 조성 확대

#### (공동체기반 포용사회 전략2-1) 시·군 계획지침

- 청년의 순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공급 및 경제활동 기회 확대 방안 마련
- 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확립 방안 강구

## 제3절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 1) 사회서비스 현황 및 미래변화

## ● 신종 감염병 확산의 세계화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 확산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면적 사회서비스 공백과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일상화된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팬데믹, pandemic)은 더욱 심화될 것임

##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증가

- 폭염, 감염병 등 재난·재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당면 과제임
- 향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재난·재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 위기는 중간계층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 인구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 변화하여 건강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효율성 중시의 보건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향후 경남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질 것임

## ● 지방소멸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동화 현상

- 서부경남 등 군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도서, 농어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

##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근린권역별 원스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
- 향후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 집행에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2) 전략의 필요성

### ● 돌봄의 지역화 시대, 지역사회 중심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주기적 확산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시설·병원 중심의 집단적 돌봄 체계에서 지역사회 및 소규모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적 접근 방식에 기반한 대면 돌봄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감염병 확산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커뮤니케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 1) 추진전략 및 목표

#### ● 핵심전략 :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 ● 전략목표 :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 ● 정량목표 : 도민의 기대수명 87세, 삶 만족도 70점 달성 등

〈표 3-3-4〉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정량목표

구분	지표	현재 수준	목표(2040년)
기대수명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생활 보장	81.9세	87세
삶 만족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	도민의 주관적 웰빙 수준 향상	61점	70점

### 2) 추진방향 및 전략

#### ● 복지와 보건의료의 통합서비스

-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와 경남형 커뮤니케어의 연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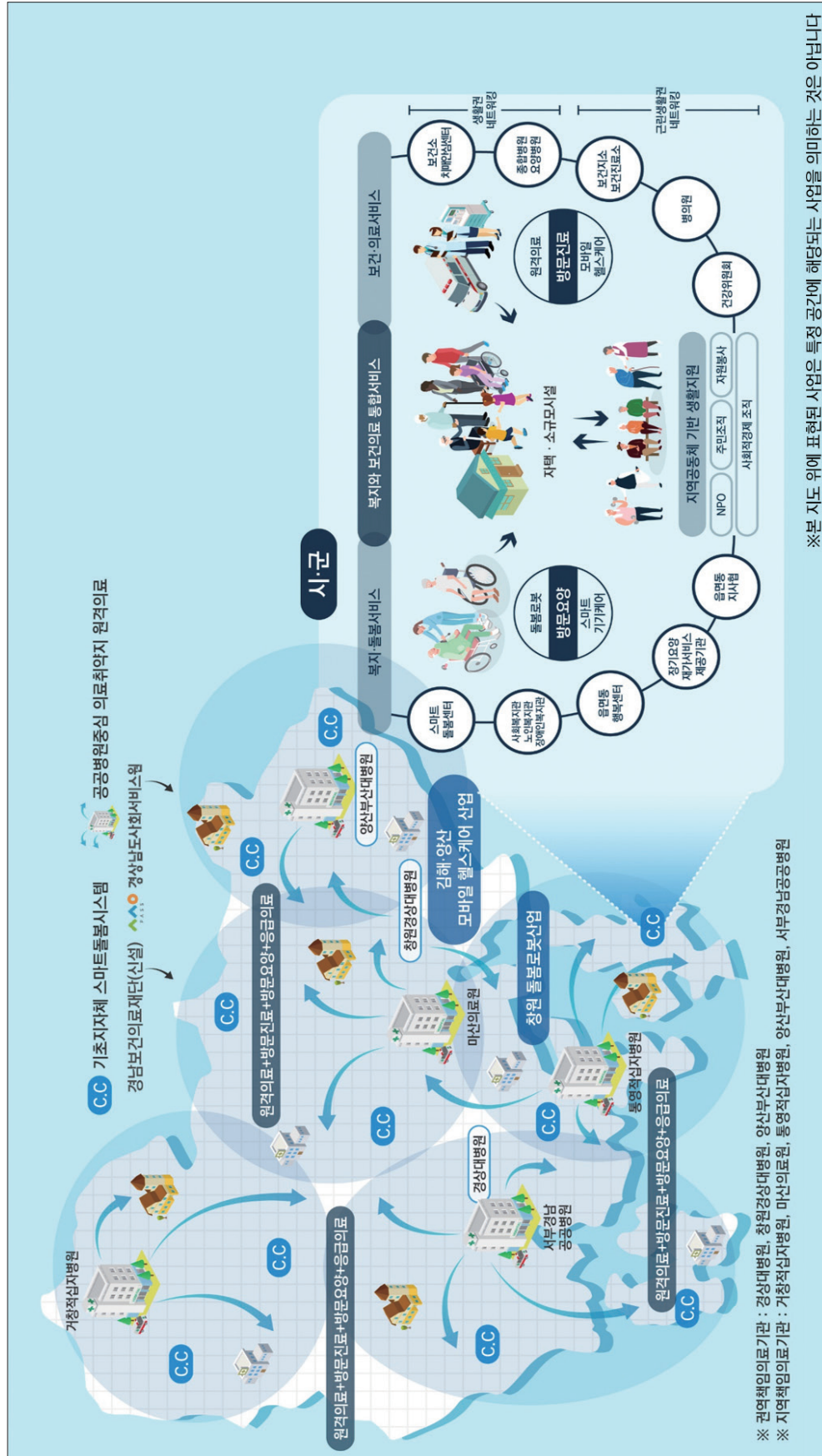
#### ● 지역공동체 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 민간 및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케어 강화

- ICT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스마트 의료 도입

〈그림 3-3-7〉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구상도

###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 1) 복지와 보건의료의 통합서비스

##### ●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의 연계성 강화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공동 모니터링체계 구축
- 광역 및 기초단위에 민관협력 커뮤니티케어협의체 구성
- 경남보건의료재단 신설 및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협력으로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
- 서부경남 공공병원, 어린이재활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등 인프라 확충
- 의료취약지 지역보건기관 의료기능 강화 및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지역 의료 및 복지인력 양성, 교육체계 구축

#### 2) 지역공동체 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 ● 민간 및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민참여형 사회서비스 확대
- 읍면동 돌봄 계획 수립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건강위원회 통합운영
- 사회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거점 조직을 활용한 주민 조직화 강화
- 지역사회 중심 아동 및 청소년 비만 문제, 학대 예방체계 구축
- 지역사회 중심 호스피스지원체계 구축

#### 3)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케어 강화

##### ● ICT를 활용한 스마트돌봄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외국인 가정에 AI 스피커, IoT 센서, 화상 영상기기 등 스마트 돌봄 기기를 보급하여 실시간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스마트돌봄 관리자, 방문 돌봄 제공인력, 사례관리자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 ICT를 활용한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sup>4)</sup>

- 재난 상황,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중심의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 추진
- 공공병원, 지역 보건기관 중심으로 원격협진사업 확대 실시(의료법 개정 후 원격의료 선도적 추진)
-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원격의료+방문진료+방문요양+응급의료’를 핵심축으로 하는 중층적 네트워크 구축(읍면동 생활권 - 기초지자체 - 권역 - 경남도)

### ● 스마트케어 운영 및 관리체계

- 권역별 스마트돌봄센터 : 사회복지관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3~5개의 읍면동을 관리하는 스마트돌봄센터 설치,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민간 부문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정보화 교육사업 실시
- 스마트케어 서비스 내용 : 실시간 안부 확인, 상담 서비스, 원격의료, 정보제공, 건강생활 관리, 치매 예방, 정보화 교육, 서비스 연계 등
- 돌봄로봇산업 육성 : 경남의 기계산업과 첨단로봇산업을 연계한 돌봄로봇산업 육성, 김해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김해/양산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 사업, 경남 로봇랜드와 연계하여 추진
- 돌봄로봇<sup>5)</sup> R&D : 돌봄로봇연구개발센터 정부 건의 및 유치,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과 종합재가센터 중심으로 돌봄로봇 시범사업 실시, 지역대학 전문 인력양성과정 개설

#### (공동체기반 포용사회 전략3) 시·군 계획지침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및 주민참여 확대 등의 근린생활권 네트워킹 강화 전략 수립
-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케어 강화 방안 강구

4) 원격의료는 전화 진료, 화상 진료와 타 기관의 진료기록, 영상을 전송받아 진단하는 원격진료에 더해, 환자 개인 의료기기에서 측정된 건강정보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까지 포함함(주간경향 1377호, '비대면 의료' 의료계 반발 넘을까), 모바일 헬스케어는 태블릿,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혈압, 혈당, 맥박 산소, 수면성 무호흡 등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체신호를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측정할 수 있음(부산연구원, Post COVID-19 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2020, p76).

5) 돌봄로봇은 로봇기술을 도입한 복지 용구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제공인력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돌봄로봇은 이용자의 이동·식사·배설·입욕·복약 등을 지원하고, 치매 노인 관리, 커뮤니케이션(말벗), 건강 체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감염병 예방, 이용자의 존존기능 및 자립 능력 강화,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부족 문제 해소).